

이재명·주철현,尹정부 인권 침해 강력 비판

李 “UN인권이사국 탈락, 현 상황 상징적 보여줘”

周 “반인권적 작태 정치검찰 조직적·악의적 진행”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주철현 인권위원장이 인권을 외면하는 윤석열 정권에 대해 한목소리로 비판하고 '평등법(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국민 공감대 증진에 당 인권위원회가 앞장서 노력하기로 했다.

민주당 인권위원회는 20일 오전 당대표 회의실에서 이재명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출범식을 갖고 본격 활동을 들어갔다.

출범식에서는 이 대표가 부위원장 18명에 대해 직접 임명장을 수여했고, 이어진 1차 회의에서는 '평등(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전국민적 공감대 증진 방안과 검찰의 과잉·표적 수사로 인한 피의 사실 공표와 명예훼손 등 인권 침해 대응 전략을 모색했다.

이날 이재명 대표와 주철현 인권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윤 정권이 전 정권과 야당을 겨냥한 전방위적 표적·기획 수사에 따른 인권 침해와 이태원 참사 유가족을 향한 2차 가해 및 인권 말살 책동 등 인권상황 퇴보에 대해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에 의한 인권 후퇴가 일상이 되다 보니 인권의 중요성이 심각하게 대두되는 것 같다”며 “옛날에 ‘막걸리 보안법’이라는 말이 있었는데 혹시 이 말을 했다가 압수수색당하지 않을까,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해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만평을 그렸다는 이유로 학생이 탄압 받거나, 있는 사실을 보도했다고 기자와 언론사를 핍박하고 심지어 세무조사를 해 수백억 원의 세금을 부과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표는 “대한민국이 UN인권이사국 선거에서 탈락했다고 한다”며 “방글라데시 등도 이사국이 됐는데 오랫동안 이사국을 역임해 온 한국이 탈락했다는 사실은 우리 인권상황이 어떤지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또 “정치인은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일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가끔 잊어버리는 것 같다”며 “민주주의를 확고히 다져 내고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게 예방할 뿐 아니라



민주당 인권위원회 출범 20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인권위원회 출범식 및 제1차 회의에 참석한 이재명 대표와 주철현 위원장 등 위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실제 발생 시 우리 당 스스로 인권 침해 방지 및 구제 활동에 적극 나서주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주철현 인권위원장은 “(윤석열 정권의 전방위적 기획수사는) 전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를 겨냥하는 표적수사이자 정치 탄압”이라며 “전례를 찾기 어려운 보여주기 수사, 낙인찍기 수사, 망신주기 수사 등 반헌법적, 반인권적 작태가 정치검찰에 의해 조직적·악의적으로 무리하

게 진행되면서 피의사실 공표와 명예훼손 등 국가기관에 의한 심각한 인권 침해가 노골적으로 자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와 국

민의힘은 존엄한 국민의 책임 추궁 명령을 무시하고 무능·무책임·거짓말로 일관하는 이상민 장관 감싸기에 몰두하며, 암사라는 단어를 지우고 희생자들의 시신을 여기저기 흩어놓아 유족들 간의 소통을 차단하고 있다”며 “국민의 애도 방식을 통제하는 등 온갖 폐악질을 일삼으며, 참사 진상과 책임 규명을 요구하는 희생자와 유가족, 그리고 국민의 가슴에 대못질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야말로 잔인한 2차 가해이며 인권을 말살하는 범죄”라고 강하게 성토했다.

그러면서 그는 “민주당 인권위원회는 이재명 대표와 함께, 어떤 정권, 어떤 시대에서도 인권에 담긴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가 지켜지고 인권 상황이 더욱 개선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 싸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주 의원은 “OECD 34개 회원국 중 한국과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에서 평등법이 시행 중에 있는 만큼 평등법은 국제적, 보편적 입법이었다”며 “UN기구들도 13차례 걸쳐 우리나라에 평등법 제정을 권고했고 최근에는 유엔난민기구(UNHCR)도 국회에 계류 중인 ‘평등 및 차별금지법’ 제정을 지지한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고 인권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 인권위원회 부위원장은 전국 17개 시·도당의 추천을 받아 민주당 인사 검증 시스템을 통과한 다양한 분야의 18명(청년 50%, 여성 38%)으로 구성됐다. /김진수기자

김희재 ‘노후국가산단’ 토론회 개최

“안전한 여수산단으로 탈바꿈 시켜야”

더불어민주당 김희재 국회의원(여수)은 지난 19일 오후 2시 여수시 청소년수련관에서 전남도, 울산시와 공동으로 ‘노후 국가산단 대개조 추진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죽음의 화약고”라 불리며 계속 중대 재해가 발생하고 있는 노후국가산단의 안전을 확보하고 디지털화·저탄소화 등 대개조 사업을 통한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 최근 6년간 20년 이상 노후화된 산업단지에서 발생한 중대사고는 123건으로 산업단지 전체 중대사고 중 98%가 노후산단에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중대사고로 인한 사상자는 20년 이상 노후산단에서 98.4%, 40년 이상 노후산단에서 71.7%가 발생했다.

토론회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임지총괄과 김길중 사무관과 한국산업단지공단 영동일 전남지역본부장, 전남도 임만규 사회재난과장과 김미순 기반산업과장, 울산시 이흥용 원자력산업안전과 과장, 여수산단공동발전협의회 김신 사무

국장 등이 참석해 의견을 교환했다.

김희재 의원은 인사말에서 “국가산업단지는 핵심 경제 거점”이라며 “하지만 조성된 지 수십 년 이상 된 노후산단에서 중대사고와 사상자의 98.4%가 발생하고 있어 안전 확보를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노후 국가산단의 안전 확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속 가능성 확보 등 산단 대개조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돼 매우 뜻깊다”고 말했다.

토론회에 나선 산업통상자원부 김길중 사무관은 “산단 내 중대 사고의 지속적인 발생으로 생산시설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와 산단 안전관리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며 “산업단지 안전 확보를 위한 내년도 예산 확대를 위해 석유화학산단 통합안전체계 구축과 산단 세이프티존 안전솔루션 지원, 산단 재난 정보 통합시스템 등 신규사업 반영도 함께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사무관은 “디지털 기술 적용으로 생산 시설 안전 확보, 통합안전관리시스템

구축, 산업직접법 개정도 추진하며 산업단지 안전 확보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산업단지공단 영동일 본부장은 “여수국가산단은 산단 대개조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공정혁신 시물레이션센터 설치, 산단형 초임계 이산화탄소 발전 산업화 지원센터 구축, 공용파이프랙트 구조안전성 확보 등 여수산단의 경쟁력·안전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남도 김미순 기반산업과장은 “여수 국가산단 대개조를 위해 CCU실증지원센터 구축 등 34개 사업, 1조2천831억원 규모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면서 “산업고도화 및 신산업 육성을 통해 지역 일자리 거점단지를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지난 국정감사에서 노후국가산단 안전 확보를 위한 특별법 제정 필요성에 대해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전적으로 동의했다”며 “노후 국가산단의 안전과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노후국가산단 특별법’ 통과를 위해 관계 부처와 협의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수기자

유승민 ‘당심 100%’ 전대룰에 “총선 참패”

“尹대통령 1인의 사당 만드는게 그들 목표”

국민의힘 비윤(비윤석열)계 당권주자로 꼽히는 유승민 전 의원은 19일 차기 당 대표를 일방국민 여론조사 없이 ‘당원 투표 100%’로 선출하기로 한 데 대해 “축구 하다가 골대 옮기면 안 된다”고 했는데 결국 오늘 골대를 옮겼다”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오후 KBS 1TV ‘사건건’에 출연해 “저 유승민 한 사람을 잡으려고 대통령과 윤석열(윤석열 핵심관계자)들이 이렇게까지 심하게 하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유 전 의원은 전대 료 개정과 관련, “권력의 폭주”, “전당대회가 막장드라마”,

“민심을 싫어하는 마인드”, “해당(害黨) 행위” 등 언어로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 “이번 결정은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유승민 하나를 죽이기 위한 폭거”라며 “오늘의 료 개정은 수도권 선거를 포기한 것이니 총선 참패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경선 과정에 양금이 남아서 저를 배제하는 것 같기도 하다”며 “그분들 목표는 당을 100% 윤 대통령 1인의 사당(私黨)으로 만드는 거다. 총선 공천에서 소위 말하는 ‘진윤 갑별사’들이 설쳐가지고 ‘진실한 윤석열의 사람들’로 공천하겠다는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2016년 박근혜 정부 당시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의 총선 참패 원인으로 지목됐던 ‘진박(진실한 진박·진짜 진박)갑별사’ 논란을 떠올리게 하는 대목이다.

그는 “여당이 대통령실 거수기와 총장소 역할을 해서는 성공할 수 없다”며 “정부가 잘못하면 야당이 뭐라고 하기 전에 여당이 먼저 견제해야 성공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 취임 7개월 평가로는 “아직은 별 5개 중 2개 정도가 국민들 평가”라며 “대통령이 미국 갔다 와서 ‘바이든 날리면’이라고 한 것이 국민들에게 가장 기억에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축구대표팀처럼 ‘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계속 정치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한 뒤, 전대 출마 결심과 관련해선 “소명 의식에 대한 확신이 들면 언제든지 말하겠다”고 했다. /연합뉴스

시도지사協, ‘제1차 지방시대 자문위’ 개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이철우 경북지사)는 지방시대 정책의제 발굴을 위해 19일 협의회 사무처 대회의실에서 ‘제1차 지방시대 자문위원회’(위원장 김재구 명지대 교수)를 개최했다. 이번이 새롭게 출범한 지방시대 자문

위원회는 17개 시·도 추천 위원과 협의회 추천 8명 등 분야별 각 25인으로 구성되며, 지방자치 분권분야, 지방재정 분권분야, 지역균형 발전분야 정책 전문가가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지방시대를 여는 일은 한시도 지체해서

는 안 되는 시급한 과제이지만 ‘지방시대 위원회 설치’를 위한 임박(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이 국회 상임위법안소위에 상정도 되지 못한 채 계류 중인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시·도지사협의회에서는 선제적 대응으로 지방시대자문위원회가 지방시대의 한축을 담당하는 명실상부한 지방정책 자문기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김진수기자

남자들은 다 아는 바로 그 제품

New 씨알-렉스

남자한테~ 표현하기가~
어제와 다른 오늘의 활력을 느껴보세요!
나를 위한 좋은 습관, 씨알-렉스

드신 분은 말씀하십시오 역시! 씨알-렉스!!
효능·효과는 묻지마세요!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2개월분(60포) : 198,000원 → 148,000원

(주) 보람약품

주 문: yuhanbio@naver.com 네이버 카페 씨알렉스 검색

택배비: 농협 351-1107-2991-93 (예금주:유나은)

시·군 대리점모집 광주본사: 010-4624-5046

전북지사: 010-7704-2490